

# “영리병원·환경가치 고려없는 조항 삭제”

### 도의회, 어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7조 폐지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관련 조항과 제주의 환경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는 14~15일 이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 이어 15일 제2세션은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오상원 국장은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제주도민의 열망’,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강화요구’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며 “제주도민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국장은 제주특별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인 제307조를 꼽았다. 오 국장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제308조를 비롯해 제309조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의 법 적용,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 외국인 전용약국 개

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는 자동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법상 환경관련 특례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의 목적인 제주의 가치 보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특별법인지, 이와 상반될 여지가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고도의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주민복리를 위한 수단이므로 향토문화나 환경가치 고려없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부당하게 비중을 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혜기자 dhkang@ihalla.com

# 총리 교체 포함 개각... 靑도 동시 개편

### 문대통령 ‘쇄신 의지’ 부각 총리에 김부겸 전 장관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사퇴를 발표하면서 후임 총리 후보자를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인사들 총리로 낙점한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총리 교체와 함께 5~6개 부처의 개각이 예상된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꼽힌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각 → 청와대 비서진 개편 → 새 총리 지명’으로 이어지는 순차 교체 방안을 고려했으나,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원샷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떠나고, 그 자리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표고버섯 체계적 육성·지원 고품질 버섯종균 실증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표고버섯산업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2억 7000만원을 투입,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제주도 표고버섯의 전통성·역사성 제고 위한 제주표고버섯 역사홍보관 구축 및 국가산림문화유산 등록 ▷지역농가 육성을 위한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지원 ▷제주 기후에 맞는 고품질 버섯종균(품종) 실증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표고버섯 농가 재배기술 및 소비자장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 임산물 브랜드가치 증대를 위한 홍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사례 조사 등 제주표고버섯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 표고버섯산업은 하나의 단순한 품목이 아닌 한라산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산업자원이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혜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 원희룡 “무리한 탈원전보다 탈석탄 우선”

### 어제 국회서 국민의힘-제주도 ‘기후 변화 정책협의’ 현 정부 정책 비판...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 제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탈석탄’ 정책을 기후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등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전제적인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지사는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발전 관리문제, 석탄발전소 증가, 해외 원전 수출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원 지사는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으로 ▷탈석탄을 기후에너지 정

책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국가 정상급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력 협의체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거버넌스 복원 ▷2030 미래세대가 정책결정 중심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미국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석탄발전 퇴출을 비롯, 강도 높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혜기자

# 김우남 “언행 죄송... 감찰 성실히 임하겠다”

### 사내 게시판 통해 공식 사과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남(66) 한국마사회 회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우남 회장은 15일 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부끄럽고 잘못된 언행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국민께 죄송하다”며 “상처받은 임직원들께도 사죄한다”는 글을 자필 서명과 함께 올렸다.

김 회장은 “말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대통령께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지시한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마사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반대하자 결국 김 회장은 자신의 이전 보좌관을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회장은 “감찰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추진과 그 과정에서 폭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지하수 오염 기준 평가 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은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다.

이번 용역은 지하수 수질 오염 실태 분석을 통해 ▷적정 관측밀도 설정과 기준 마련 ▷수질 자료의 활용

과 평가방법 도출 ▷최적의 모니터링 방안 제시와 제도화 등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수질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실무 지침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도화된 수질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지하수 관리의 연속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적인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대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놀이온(OI)**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놀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의 궁금해 하는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놀이의 대가, 김명순 교수님과 함께 나눠요~!

**2021. 4. 21.(수) 10:00~13:00 비대면교육(ZOOM)**

강사: 김명순 교수(EBS 놀이의 힘, 놀이의 기쁨 자문위원)  
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등  
교육신청 및 문의: 064-746-2211(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JEJ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당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림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전기수도매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